

쿠팡·네이버 등 쇼핑몰 28개사 ‘다크패턴’ 자가점검·시정 나서

공정위, 인터페이스 자율규약 승인
자진시정시 제재 완화로 뒷바침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실태 점검

쿠팡·네이버·G마켓·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28개사가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스스로 점검·시정하는 자율규약을 1일부터 시행한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으로 법적 금지 유형이 생긴 데 이어 업계가 한발 더 나아가 ‘몰래 장바구니 추가’ 등 법령 미포함 영역까지 자율적으로 금지하고, 공정위도 자진시정 시 제재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뒷바침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이하 사업자협회)가 마련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심사·승인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G마켓, 롯데쇼핑, 무신사, 쿠팡, 카카오, 신세계라이브쇼핑,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등 총

28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지난 2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차공개 가격책정 ▲잘못된 계층구조 ▲특정옵션 사전선택 ▲취소·탈퇴 방해 ▲반복간섭 ▲숨은 갱신 등 6대 다크패턴이 금지됐지만, 공정위는 엄정한 법 집행과 더불어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3에 따라 마련된 이번 자율규약은 ▲다크패턴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 ▲자율준수협의회 설치·운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영역인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속임수 질문’ 등 소비자 불편을 유발하는 인터페이스까지 자율 금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규약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사업자협회는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이 참여하는 ‘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했다. 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참여 기업의 준수 실태를 점검하고,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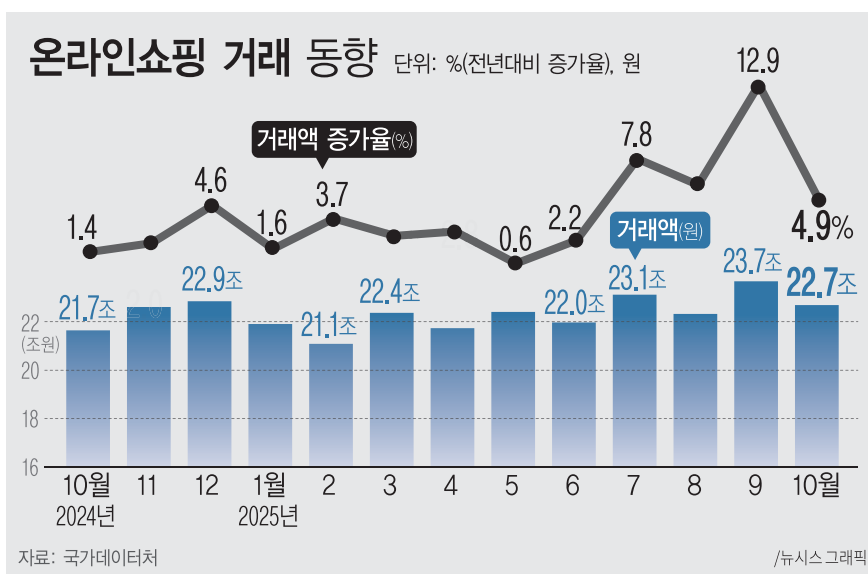
선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나 실적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사업자협회는 공정위의 11월 7일 심의·승인 이후 참여사 모집과 위원 구성 등 준비를 마쳤고, 이날부터 자율규약을 전면 시행한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행위가 향후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조치 전 시정 권고를 통해 자진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제정·시행을 통해 업계의 자발적인 법 준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온라인 다크패턴이 예방되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온라인 쇼핑액 4.9% ↑ 22.7조 ‘역대 4위’

데이터처, 10월 온라인쇼핑동향
작년 7월 ‘티메프 사태’ 소비 위축
지난 7월부터 반등 시작 ‘회복세’

온라인 쇼핑 거래가 22조7000억원을 돌파하며 거래액 기준 역대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쿠폰서비스 거래액은 20% 넘게 뛰면서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 온 티메프(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모양새다.

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0월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4.9% 증가한 22조71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4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역대 1위는 지난 9월 23조6994억원이고, 2위와 3위는 각각 지난 7월 23조1427억원과 지난해 12월 22조8696억원이다.

온라인쇼핑은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여파로 소비가 크게 위축됐지만, 올해 7월부터 반등을 시작하며 회복세로 돌아선 모습이다.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은 지난해 7월 6.6%에서 8월 3.6%, 9월 3.4%, 10월 1.4%, 11월 2.0%, 12월 4.6%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 들어서도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로 부진을 이어가다 7월 들어 증가율이 7.8%까지 크게 반등했고, 8월에도 6.6% 뛰었다.

특히 9월은 증가율(13.3%)과 금액(23조7956억원) 모두 통계 작성 이래 역

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 10월의 경우, 상품군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료품(4.4%) 등에서 증가했다.

특히 티메프 사태 이후 1년 넘게 감소해왔던 이쿠폰서비스는 전년 동기 대비 21.5% 뛰어, 지난해 6월(28.3%) 이후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문화 및 레저서비스(-22.2%), 서적(-20.5%), 가구(-9.6%), 가방(-9.5%) 등에서 거래가 감소했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음식서비스는 지난 9월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시작됐고, 그에 맞춰서 공공 배달앱 쪽에서 할인 행사가 많이 진행됐던 점이 영향을 미쳤다”며 “자동차 관련에선 최근 수입 전기차 쪽에서 인도 물량이 계속 증가했고, 신형차 출시가 늘어난 점도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쿠폰 서비스는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티메프 사태로 인한 감소세에서 벗어났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서비스(15.7%), 음·식료품(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714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증가했다.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32.6%), 이쿠폰서비스(27.9%), 컴퓨터 및 주변기기(17.7%), 음식서비스(13.4%) 등에서 증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액 3조 늘어난 122조

산업부,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
3분기까지 투자이행률 68%로 양호

올해 10대 제조업 국내 투자가 당초 계획보다 3조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투자는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부는 1일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 대표 기업들과 함께 김정관 장관 주재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16일 대통령 주재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합동회의’ 후속으로, 올해 투자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국내투자 촉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우선 올해 10대 제조업 투자 계획은 연초 조사됐던 119조원보다 3조원 상향된 122조원으로 재집계됐다. 10대 제조업 설비투자 계획은 2023년 100조원, 2024년 110조원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 추세다. 미국의 관세 부과와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산업투자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영향으로 미국 등 해외로의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미정이던 자동차, 배터리 등 투자 계획이 확정되면서 증가했다.

3분기까지 투자 이행률도 전년 동기과 같은 68%로 양호한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투자가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전산업 설비투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10대 제조업 투자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우상향 중이다. 투자 계획의 약 80%를 차지하는 반도체, 자동차가 확장세를 주도하고 있다. 반도체는 견고한 글로벌 AI 수요 성장세에 발맞춰 HBM 등 첨단메모리 중심 투자가, 자동차는 전기차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국내 투자 증가세 유지를 위해 전기차 보조금 신속 집행, 정책금융 공급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도 도입, 전기요금 인하 등을 요청했다.

김정관 장관은 “요즘처럼 각국이 기업을 유치하는데 경쟁적인 시대에 국내투자는 ‘내가 대한민국의 기업’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척도이자 바로미터”라며 계획된 투자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기업 차원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 개선 등 국내투자 촉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최대한 제안해달라”며 “기업 경영 활동에 장애되는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경기 등 7곳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지정

농식품부, 기업지원체계 구축 나서

농림축산식품부가 1일 경기와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 7개 도(道)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로 지정했다.

육성지구에서는 지역 내 그린바이오 기업, 대학·연구기관, 실증·인증 인프라 등 산·학·연·관이 집적된 거점을 중

심으로,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주기 기업지원체계 구축에 나서게 된다. 이 제도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올해 처음 도입됐다.

그린바이오산업은 미생물·천연물·식품소재·곤충·종자·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차세대 산업이다. 이번 육성지구 지정

을 통해 지역 기반의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기업의 실증·평가·인증·사업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육성지구 지정 지역을 대상으로 그린바이오벤처캠퍼스·바이오파운드리 등 정부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 지구 내 기업에는 각종 지원사업 가점과 공유재산 특례 등 정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ICA 아태 이사 재선

기후위기 등 농업현안 대응 강화 약속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아태지역 총회에서 임기 4년의 이사로 선임됐다.

1일 농협에 따르면 강 회장은 회원기관들의 지지 속에 ICA 아태지역 이사로 재선에 성공했다. 지난달 27일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열린 이번 총회엔 아시아·태평양지역 29개국 122개 회원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그는 ▲기후위기·식량안보 등 농업현안에 대응하는 협동조합의 역할 강화 ▲한국농협의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 경험 공유 ▲아태지역 협동조합 간 협력 확대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그간 ICA 농업분야분과기구인 국제협동조합농업기구(ICAO) 회장을 맡아 왔고, 올해 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농민의 마음이 곧 하늘의 뜻’이라는 ‘농심전심’ 운동을 주도했다. 이를 토대로 ICAO 서울선언문을 선포하는 등 한국농협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ICA는 전 세계 100여 개국의 300여 개 협동조합 및 연합회가 가입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정부기구다. 10억 명 이상 조합원의 이익을 대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세계 10대 협동조합으로서 ICA 이사기관, ICA 아태지역 이사기관, ICA 농업분과기구(ICAO) 회장기관을 맡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